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위원
ygkim@kiep.go.kr

남시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snahm@kiep.go.kr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
nnkim@dongguk.edu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급진화된 지난 수십 년간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하게 됨.
 - 개방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룬 반면, 그 과정에서 심해진 불평등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선진국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음.
 - 소득불평등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기술진보, 재분배 정책 실패와 같은 대내적 요인 외에, 자유무역, 이민 및 다문화 문제, 국제 자본이동 등 대외적 원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결국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Brexit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짐.
- 한편 한국은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국내 불평등도 악화, 자유무역의 성과 확산 미흡으로 인해 개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온 한편 GVC를 적극 활용한 결과, 교역 및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얻어냈으나, 그 성과의 분배에 관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결국 자유무역정책이 소득불평등과 분배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인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혜 및 피해 계층에 대해 혜택의 재분배 또는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존재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분배구조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대외개방요인들이 국내 분배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
 - 국내에서도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로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가에 대한 컨센서스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
 - 본 연구에서는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분석함으로써 본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① 분배구조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지표(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최상위 소득 비중, 분포

파라미터)를 활용했으며, ② 분배구조 변화와 대외개방과의 영향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했고, ③ 선행연구 이론 틀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기여라고 할 수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내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와 변화요인

- 국내 소득불평등도 실태를 추정하는 데는 크게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소득세자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자료의 입장일단이 존재
 - 다만 공식통계의 근거가 되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고소득계층의 누락 및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 등으로 실제보다는 소득불평등도를 과소추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를 보정한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영미에 비해서는 낮지만 유럽 및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분석에 사용한 자료마다 측정한 소득불평등도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 하락 또는 정체에 추세를 보임.
- 국내 소득불평등 변화의 요인으로는 크게 ①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둔화, ② 숙련편향적 기술 변화, ③ 개인소득 증가의 둔화, ④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⑤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⑥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음.

2) 국내 분배구조의 생산요소별, 소득원천별, 산업별, 직업별 분해분석

- 거시자료인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 간의 기능적 분배구조를 파악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분석
 -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에는 72.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
 - 제조업 가운데 한국의 교역 비중이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2009년 이후, 운송장비 제조업은 2000년대 중후반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은 2000년대 접어들어 대체로 하락세인 반면,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공식적인 소득불평등도 측정에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분해분석함.
 -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결과,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가 상당 부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간 완화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불평등도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졌음.
- 단일지표로 소득의 분포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Champnowne-Fisk 분포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의 변화를 관찰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위값 근처에서는 완만하게 변동되고 있는 추세이나 고소득층에서는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에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급속하게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관리자 직업군에서는 소득 분포가 좁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의 하향화가 진전
 - 산업별 분석결과, 대부분 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동시에 소득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대외개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의 경우 모두 소득이 다소간 상승하였음.

3)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 이론연구 정리

- 무역자유화 경우 전통적인 산업간 무역은 헉서올린정리, 스톨퍼사무엘슨정리를 이용하여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 들어 산업 내 무역, 이질적 기업, 노동시장 스크리닝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논의가 활발한 편임.
 - 산업간 무역(남북무역)은 산업구조 변화를 일으켜서 실업을 발생시키며, 산업간 무역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전적 무역이론으로 설명이 가능
 - 최근에는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내수기업은 피해를 보는 반면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더 올라가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같은 생산성의 노동자라도 마찰적 실업과 채용 과정에서의 스크리닝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기업이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리려 하고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됨.
- 기술진보와 관해서는 국제무역이 R&D 투자를 늘리거나 수출기업의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는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려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음.

- 금융시장 개방은 자본의 수익률 향상을 통한 소득 분배 악화와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통한 분배 개선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해외투자(아웃소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숙련노동 집약적 생산과정이 개도국으로 옮겨져도 개도국 내에서는 그 공정이 상대적으로는 숙련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투자국과 투자상대국 모두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국제패널 분석

- 국제 패널분석에서는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와 최상위 소득 비중을 종속변수로, 무역자유화(GDP 대비 교역, 수입, 수출비중), 자본자유화(GDP 대비 FDI, 자본계정 개방도), 기술발전(정보통신기술 교역 및 수입 비중, GDP 대비 R&D, 고위기술제품 수출 비중, 총자본대비 ICT 자본) 관련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
-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높아지고 지니계수는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남.
 -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주로 수출기회 확대가 최상위 소득계층(상위 1%)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됨.
- 투자자유화는 상위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됨.
- 자본자유화는 상위 소득 비중은 증가시키는 반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음.
 - 이는 자본자유화가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금조달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ICT 수입 비중과 고기술제품 수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나 상위소득 비중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결과는 기술진보가 대외개방보다 불평등도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나, 다만 선행연구에 비해 최근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ICT 기술의 보편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국가 내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술진보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5)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한국 산업별 패널분석

- 산업별 분석에서는 총 네 가지의 종속변수(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분포 파라미터 β 와 γ)를 고려했으며, 설명변수로는 산업별로 가용한 수준에서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R&D 투자, 교육 관련 변수를 포함함.
- 노동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결과
 - 제조업의 경우 수출이 증가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아지고 경쟁력이 확충될수록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력 제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확대가 1인당 노동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됨.
 - 한 산업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제조업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했음.
 - 즉 외국인투자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아직까지는 노동집약적이어서 외국인투자 증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 수출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 고소득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소득감소가 예상되어 주로 중위소득계층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즉 수출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득이 증가하나,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 확대가 제조업에서는 주로 중위소득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하위소득계층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됨.
 - R&D 투자 확대는 제조업에서는 고소득층에는 부정적으로 저소득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R&D 투자의 제조업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파급경로를 식별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정책 제언

1) 분배구조의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비

-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자료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구조적으로 설문조사 등에 기반한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극복하기 쉽지 않으나, 통계청의 공식 지니계수의 근거가 되는 가계동향조사자료가 같은 방식의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최상위 소득누락 비중과 금융소득누락 비중이 높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
- 또한 가계동향조사자료의 제조업 세분화가 필요
 -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 과거 구축목적에 따라 산업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제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재의 조사자료체계는 활용상 제약이 많음.
 - 여타 산업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제조업 세분화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개선된 방식이 향후 통계 구축에 주로 사용되는 건 필수적이나 유용한 정책 판단을 위한 연구를 염두에 둔다면 최근 개선된 방식의 집계 통계를 과거로 확장하여 장기시계열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제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며,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해분석결과, 대외개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의 분배구조 변화가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농림어업에서는 지니계수가 상승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고소득뿐 아니라 저소득집단에서도 소득증가가 관찰되었음.
 - 대외개방이 제조업의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분배구조가 악화되던 시기 동안 제조업에서는 모든 소득집단에서 소득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므로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적어도 소득분배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실증분석결과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확대는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출시장 참여도 낮은 중소기업들의 활로개척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추진한 대외개방정책을 발판 삼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수출의 고용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자본집약적 산업에 속한 대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수출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업의 고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지금까지도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은 운용해왔으나, 이제는 해당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실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통상정책의 성과가 분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 주도의 다양한 FTA 활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는 낮은 편인데, 이는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 원산지 사후검증대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음.
- 한편으로는 한국형 통일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생산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화를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그동안은 주로 관세감축에 초점을 맞춰 FTA 활용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감축 이외에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협정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들에 전달하려는 노력도 필요

3)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한 개방대책 수립

● 우리 경제의 분배구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과도기적 실업, 그리고 주력 산업들의 고용창출능력 둔화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변화와 맞물려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추후 혁신성장과 병행할 수 있는 포용적 산업정책에 대한 밑그림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성과주의 보수체제 확산, 최상위 소득세 부담률 경감, 그리고 개인소득의 증가세 둔화는 모두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위소득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분배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으로 하위소득계층으로의 낙수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

의 고민이 필요

- 아울러 고령화와 1인가구의 확산은 저출산 및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소득불평등의 악화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우선 교역구조의 고도화가 분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ICT 제품의 수입 및 고기술제품 수출 비중 확대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며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질수록 하위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역 확대와 고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검토할 필요

- 점차 직업별, 산업별 소득수준 고착화 현상이 견고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직업군의 분배구조가 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개방화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자영업 및 저소득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과 함께 해외 노동 유입으로 인해 저숙련/비정규직의 노동임금이 하락 또는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산업간 또는 산업 내 노동이동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교육정책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 증가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노동소득분율과 저소득층의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서비스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고,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과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 소득원천별 분해분석결과 한국 분배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은 근로소득의 분배구조 변화에 기인함.

- 이는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가계에 귀속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3% 수준에 그치고 상위소득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금융소득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결과임.

- 따라서 대외개방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FTA 보완 대책으로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대외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EGAF)가 대표적이며, 라틴아메리카지역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함.
 - 현재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대외개방과 기술진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두 영향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우리 교역구조에서는 산업간 무역뿐 아니라 산업 내 무역도 활발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 내에도 생산성이 이질적인 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데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등에 납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어도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여타 노동지원프로그램과 통합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노동이동 활성화 정책¹⁾

- IMF-World Bank-WTO(2017) 보고서에서는 대외개방과 기술진보가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 영향이 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주요한 정책목표로 노동이동성(labor mobility) 제고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노동이동성은 산업간 이동과 지역간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임.
 - 우선 노동의 산업간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대외개방과 기술진보는 특정 산업에는 긍정적이나 다른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간 인력 이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특정 산업이 발달하고 특정 산업이 쇠락하면 이로 인해 어떤 지역에서는 노동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때로는 노동자들의 지역간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조정비용도 커지는 경우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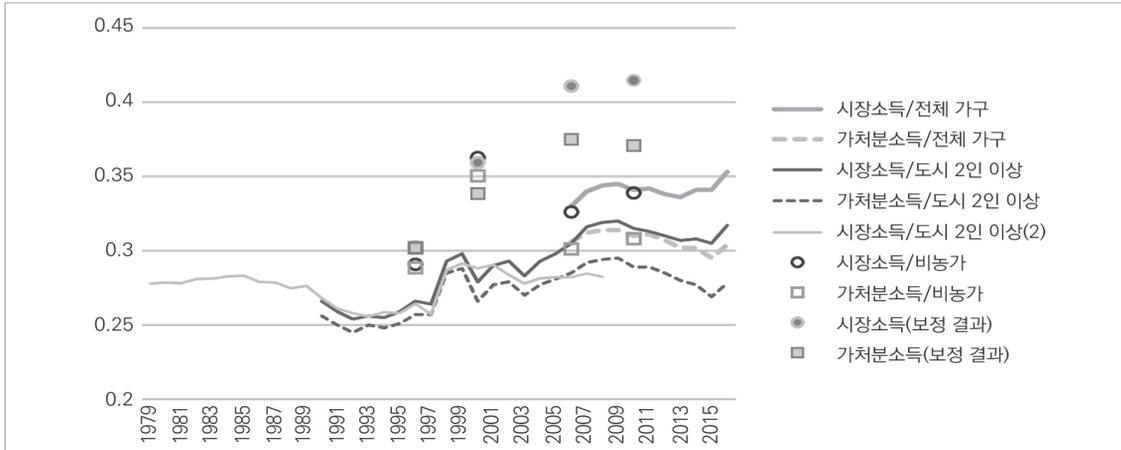
1) 본 내용은 IMF-World Bank-WTO(2017) 보고서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자들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 다만 노동이동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마찰적 비용을 줄인다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해고를 쉽게 한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온 반면, 노동이동은 취업, 해고, 이직을 모두 포함하며,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노동시장 조정비용을 줄이는,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음.
-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무역정책이 꾸준히 지지를 받고 정치적 지속성을 얻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KIEP**

[참고자료]

그림 1. 통계청 가계조사의 지니계수와 보정결과



주: 1) 각 지니계수는 통계청(KOSIS)에서 가져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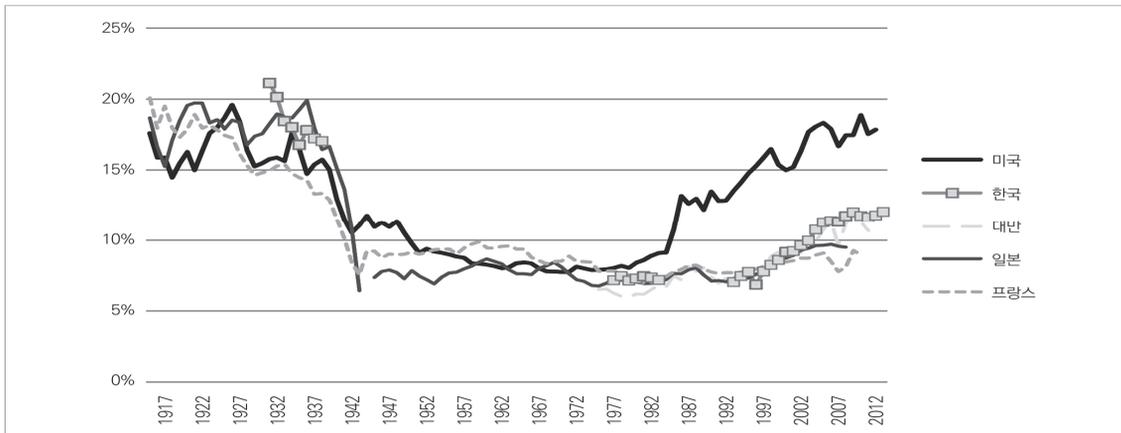
2) 다만 속이 빈 동그라미와 네모는 가계조사의 상위소득자의 과소파악을 보정한 결과(김낙년, 김종일 2013)임.

3) 속이 찬 동그라미와 네모는 가계조사의 상위소득자의 과소파악을 보정한 결과(김낙년, 김종일 2013)임.

4) 시장소득/도시 2인 이상(2)은 1990년 이전의 추이를 보기 위해 도시의 2인 이상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10분위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니계수임. 이것은 OECD 방식에 따르고 있는 다른 지니계수와 단절이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 『가계동향조사』(원자료); 김낙년, 김종일(2013), p. 5.

그림 2. 상위 1%의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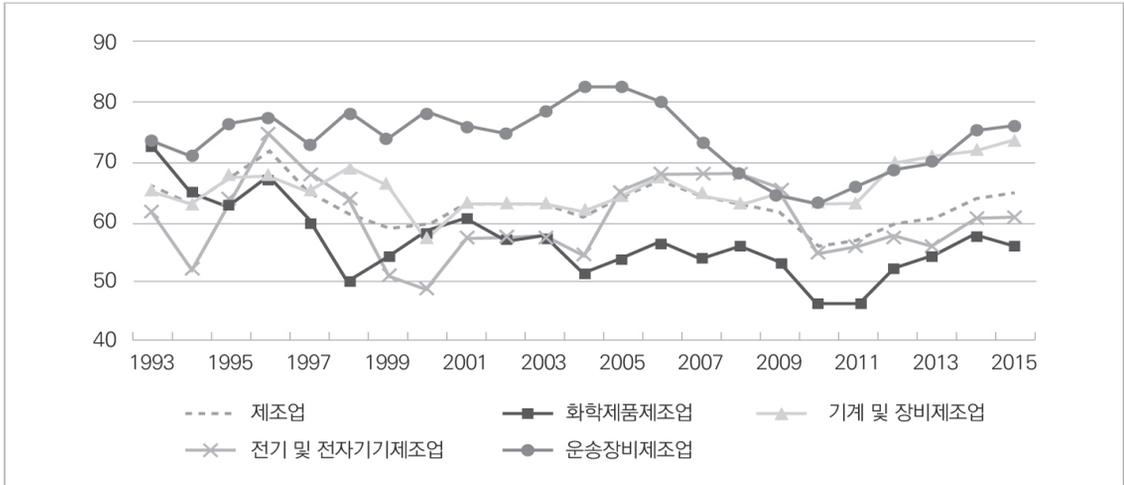


주: 한국의 해방 전 통계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WID DB(검색일: 2017. 9. 7). 단 한국은 김낙년(2017, 부록 표 2)의 업데이트된 결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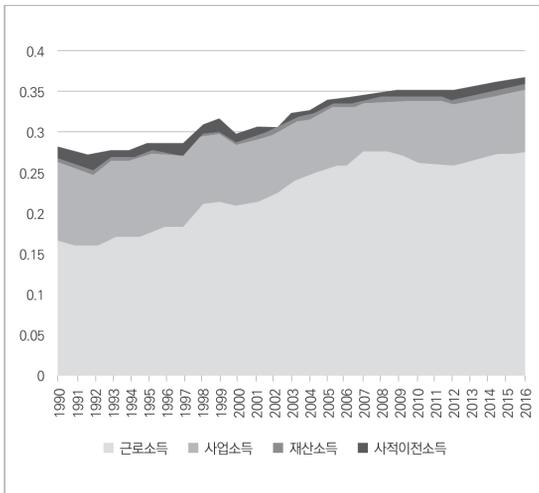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주요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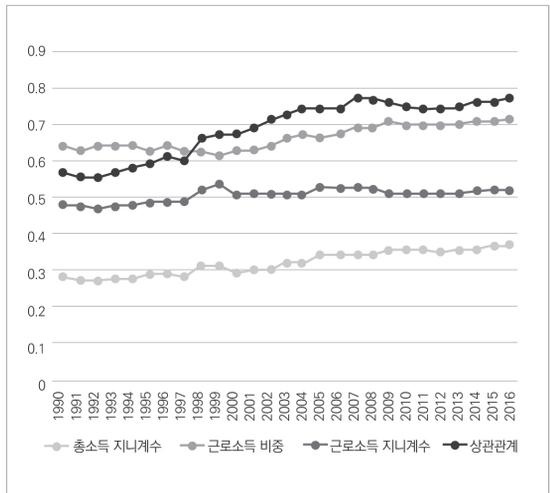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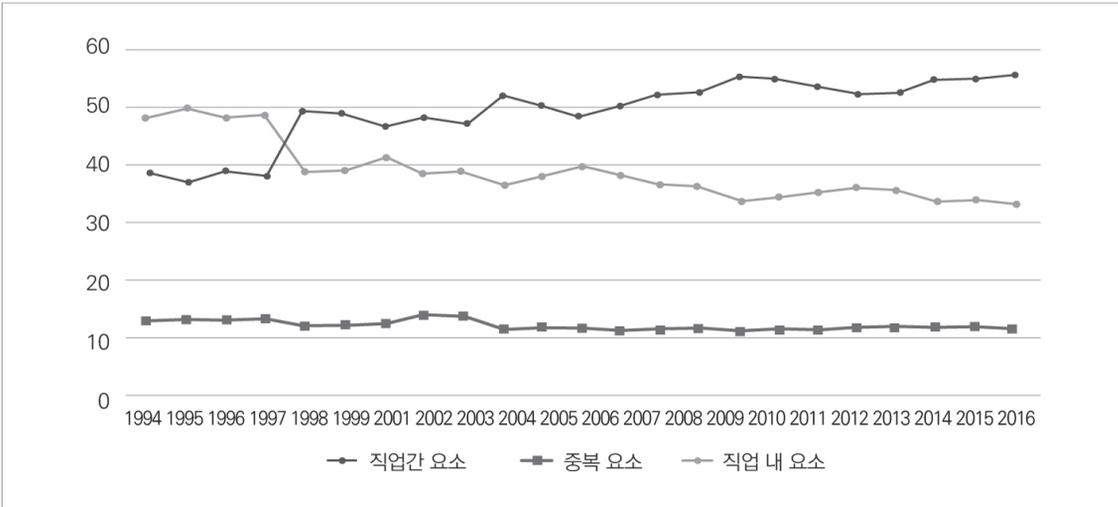
자료: 저자 추정.

그림 5. 근로소득 분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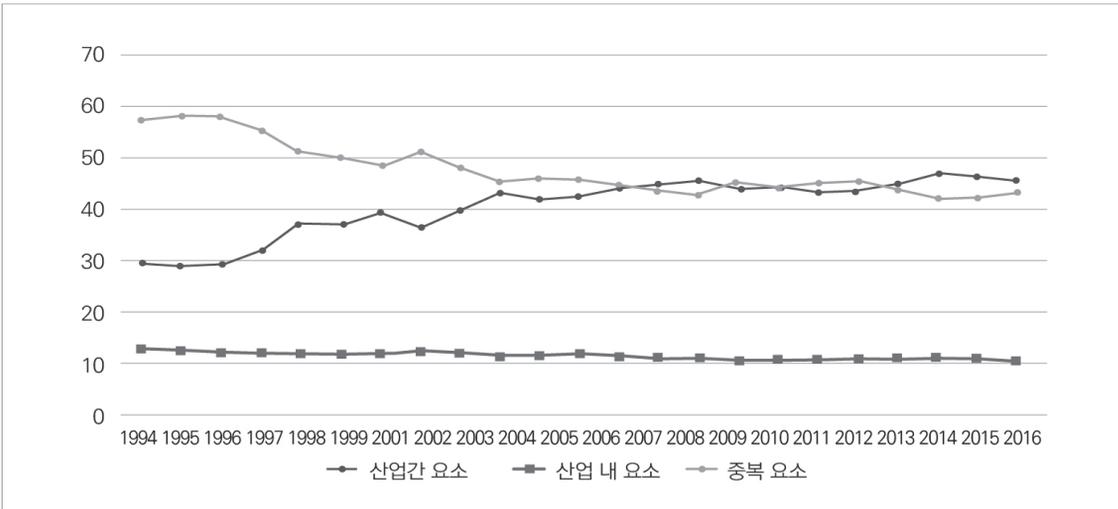
자료: 저자 추정.

그림 6. 직업별 분해결과 각 요소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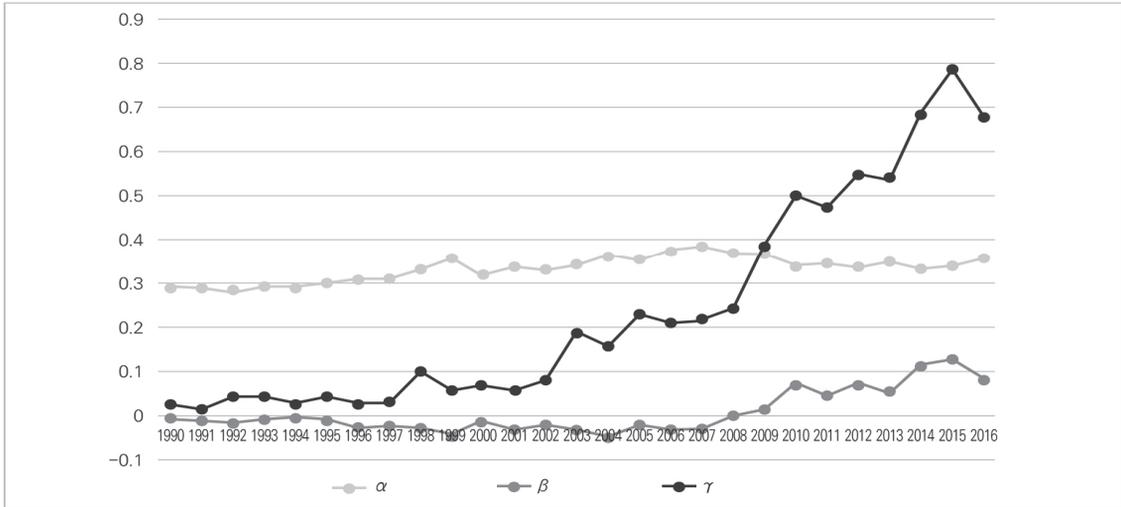
주: 직업 내 요소란 각 직업 내에서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소득 비중을 가중치로 계산한 각 직업 지니계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며, 직업간 요소는 직업간 평균소득 격차를 의미하는데 그 평균소득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지니계수를 나타냄.
 자료: 저자 추정.

그림 7. 산업별 분해결과 각 요소별 비중



주: 산업 내 요소란 각 산업 내에서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소득 비중을 가중치로 계산한 각 산업 지니계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며, 산업간 요소는 산업간 평균소득 격차를 의미하는데 그 평균소득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지니계수를 나타냄.
 자료: 저자 추정.

그림 8. ABG 파라미터의 추이(전체)



주: 1) α 는 분포의 중위값에서의 변화를, β 와 γ 는 각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며, β)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를 γ)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의미. 자료: 저자 추정

표 1. 국제 패널 분석결과 요약

종속변수	ln(지니계수)		상위10% 소득 비중	
	고정효과	집단간 효과	고정효과	집단간 효과
추정방법				
(수출+수입)/GDP	(-)	(-)	(+)	(-)
수출/GDP	(-)			
수입/GDP				
OECD 국가와의 교역/총교역			(-)	
상품교역/GDP			(+)	
FDI/GDP	(+)	(+)	(+)	
Chinn-Ito index			(+)	(-)
ICT 교역/GDP			(-)	
ICT 수입/GDP	(+)			
ICT 수출/GDP				
고기술제품 수출/총수출	(+)			
ICT 자본/총자본				
R&D 투자/GDP				

주: (+)와 (-) 표시는 해당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음을 의미함.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거나 모형 설정상 해당 변수가 없는 경우임. 자료: 저자 정리.

표 2. 한국 산업별 분석결과 요약

	제조업					서비스업							
	노동소득 분배율		지니 계수	β	γ	노동소득 분배율		지니 계수		β		γ	
	고정 효과	집단간 효과	고정 효과	고정 효과	고정 효과	고정 효과	집단간 효과	고정 효과	집단간 효과	고정 효과	집단간 효과	고정 효과	집단간 효과
TSI			(-)	(-)	(+)								
(수출+수입)/GDP	(+)	(-)		(-)	(-)								
수입/GDP			(+)	(+)	(-)								
수출/GDP	(+)	(-)			(-)								
TSI×(수출+수입)/GDP	(+)	(-)			(-)								
(수출+수입)/GDP ²					(+)								
외국인직접투자/GDP	(-)			(-)	(+)	(+)	(-)		(-)	(-)	(-)	(-)	
R&D/GDP			(-)	(-)	(-)				(-)		(-)		(-)
중간학력 노동인구 /총노동인구		(+)	(+)	(-)	(+)				(+)		(+)		(+)

주: (+)와 (-) 표시는 해당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음을 의미함.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거나 모형 설정상 해당 변수가 없는 경우임.

자료: 저자 정리.